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고령자 창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2006년 4월 28일

박 경 주 (인천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김기학 (한국전력 자재처장)



##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를 가리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단계라고 흔히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인구구조는 출산율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하여 유년인구 구성비가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 인구구성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오는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7명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통계청, 2001).

<표 1> 한국의 고령화 추이

	1970	1980	1990	2000 고령화 사회	2019 고령사회	2026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비	3.3	3.8	5.1	7.1	14.4	20.0
노인 부양비	6.1	6.4	7.1	10.0	20.1	29.7
고령화 지수	7.2	11.2	18.3	32.9	102.3	155.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1. 11.

-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UN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기준을 14%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고령화가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몇 가지 고령화 지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고령화 지수란 유소년 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연령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우리사회의 인구 노령화 현상의 급속한 증가를 반영한다. 고령화 지수는 1970년에 7.2%였으나, 2000년에는 32.9%, 2019년에는 102.3%, 2026년에는 155.9%, 2040년에는 263.2%, 2050년에는 328.4%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노인부양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 7.1%였던 노인 부양비가 점점 증가하여 2019년에는 20.1%로 청소년 인구 부양비와 노인인구 부양비의 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참고로 미래의 연도별 남녀구성비 및 연령별 구성비율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한편, 2003년 기준 노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74.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4.9%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9년에는 노인들의 33.7%만이 초등학교 이하, 44.4%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노인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고학력이고 경제력이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인력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하고 고급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정경희, 1998).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서구사회에 비해 뒤떨어진 국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인 스스로의 경제적 참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퇴직 시기는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정년이후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55세 정년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3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고 생각할 때 30세에서 55세까지의 25년간을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55세부터 약 80세까지<sup>29)</sup> 25년간의 퇴직이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득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건강한 노인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200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인구의 57.7%는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으로 파악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따라서 이렇게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건강하고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욕구를 가진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인으로서의 고령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반환경(infra-structure)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낮아지고 있어 노인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한 취업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에 따르면 노후생활비 마련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64세 이하의 비노인계층의 장래 노후에 대한 부양의식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73.7%로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는 점차 강하게 나타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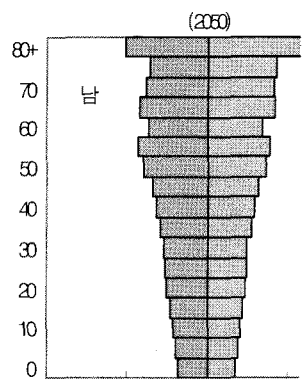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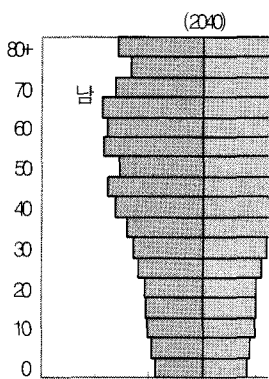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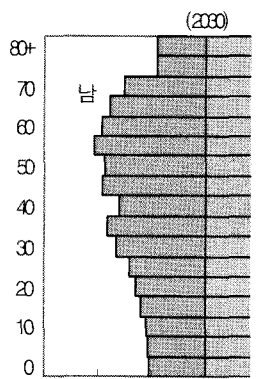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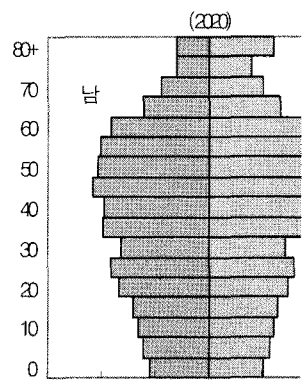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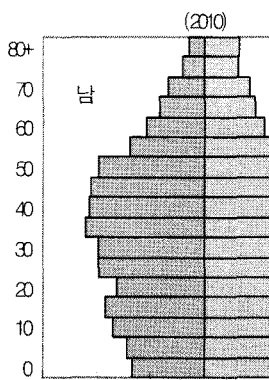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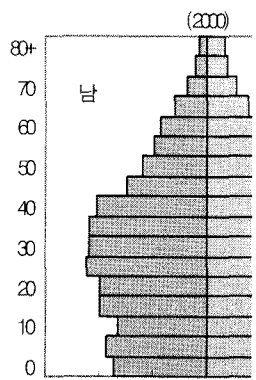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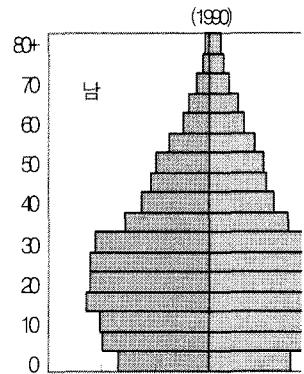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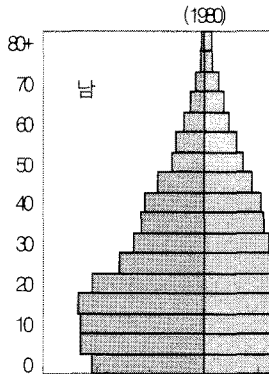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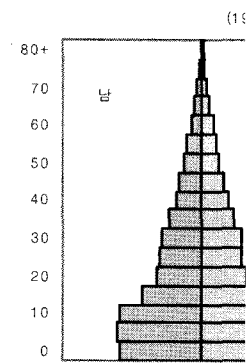
---

29)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5.9세로 남자 72.1세, 여자 79.5세이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적 부담이 증대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생산력 유지를 위해 가용 인력의 최대한 활용이 필요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을 덜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노인들의 인력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년기가 길어지고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보장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인고용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인사회참여, 즉 재취업 및 창업의 문제는 인간의 잔존능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II. 국내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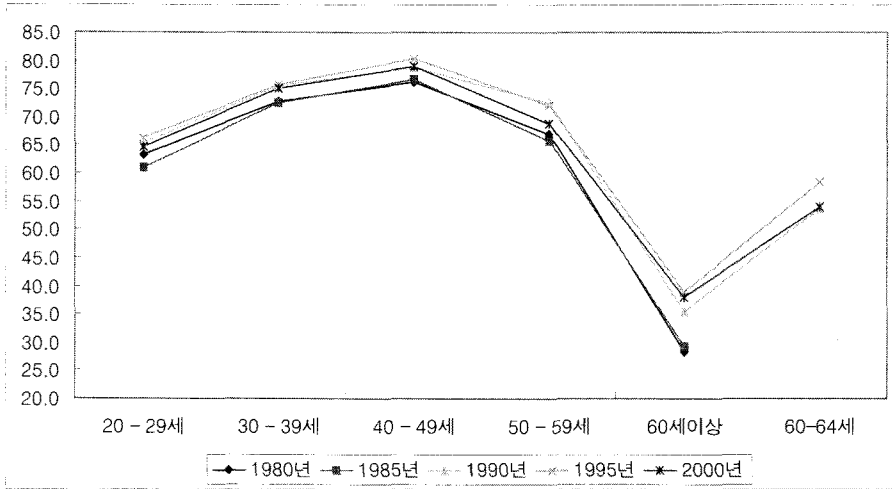
### 1. 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문제는 크게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실업률 면에서도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패턴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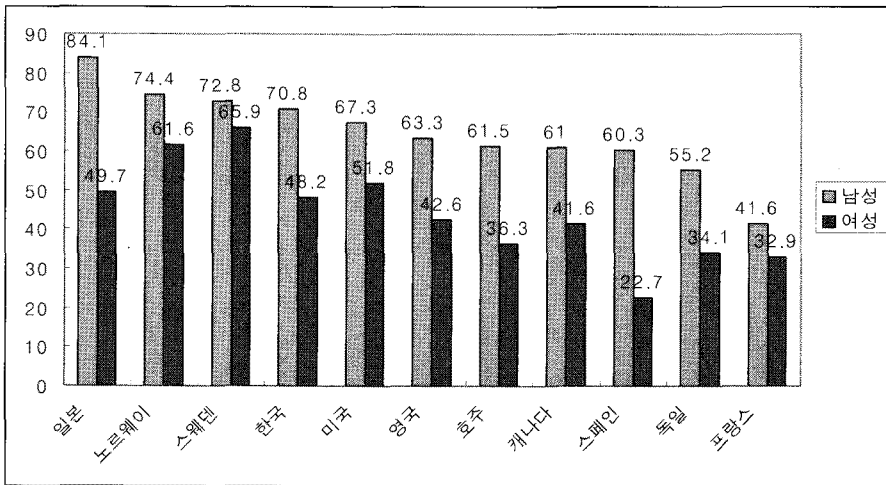
남성은 30대와 40대 초반까지 90% 이상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40대 후반과 50대 초반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50대 후반부터는 급속하게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다. 여성은 30대 초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푹 떨어졌다가 40대에는 60%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면서 피크에 달하였다가 50대 이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이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연령대는 55~64세 인구이다. OECD의 고령자 연구의 중심도 주로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0.8%, 여성은 48.2%로 나타났는데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여성의 경우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보다는 훨씬 높다.

고령자의 실업률은 청년층의 실업률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체 남성의 실업률 3.4%과 비교해서도 55~64세의 실업률 2.6%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전체 평균에 비해서 고령자 실업률의 수준은 더욱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우리나라 고령자의 수치상 나타나는 실업률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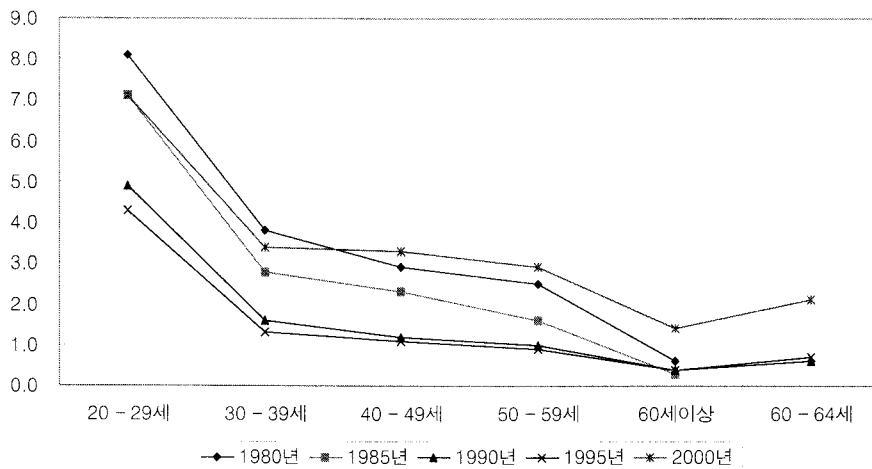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그림 2>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OECD Data  
 <그림 3> OECD 국가의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2000년)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그림 4> 연령별 실업률 추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상, 즉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체계의 현실과 노동시장구조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하고 고령자의 생계가 이들의 노동의 대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서구 사회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족주의와 부모봉양의 의식이 남아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드는 정도는 크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자영업부문과 농업부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고용구조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취업하고 있는 고령자는 대체로 자영업부문에 집중되어 있다<표 2, 3 참조>. 55~65세 남성의 45.7%, 여성의 57%가 비임금 근로자이고, 65세 이상의 경우는 남성의 72.2%, 여성의 75.2%가 비임금 근로자이다.

고령취업자가 주로 속해있는 직종은 농어업근로자와 단순노무직근로자이다. 남성 55~64세의 경우 농어업직에 25%, 단순노무직에 20.4%가 분포해 있으나, 고위관리직에도 11.7%가 분포해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농어업직과 단순노무, 판매서비스직을 합하면 약 70%에 근접하게 된다.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농어업직의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단순노무직도 15~19%에 달하여, 이 두 직종을 합치면 전체의

약 70% 수준에 이른다.

<표 2> 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천명, %)

	55~64세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상용근로자	294 ( 21.6)	39 ( 3.9)	39 ( 6.6)	5 ( 1.0)
임시근로자	185 ( 13.6)	194 ( 19.4)	63 ( 10.7)	44 ( 8.4)
일용근로자	142 ( 10.4)	167 ( 16.7)	34 ( 5.8)	77 ( 14.8)
고용주	118 ( 8.7)	29 ( 2.9)	28 ( 4.8)	3 ( 0.6)
자영자	<b>606 ( 44.5)</b>	<b>262 ( 26.2)</b>	<b>397 ( 67.4)</b>	<b>220 ( 42.2)</b>
무급가족종사자	17 ( 1.2)	<b>308 ( 30.8)</b>	28 ( 4.8)	<b>172 ( 33.0)</b>
전체	1,362 (100.0)	999 (100.0)	588 (100.0)	52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2001.

<표 3> 고연령 취업자의 직종

(단위: 천명, %)

	55~64세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입법 공무원 및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60 ( 11.7)	18 ( 1.8)	46 ( 7.7)	11 ( 2.1)
전문가	57 ( 4.2)	10 ( 1.0)	22 ( 3.7)	2 ( 0.4)
기술공 및 준전문가	51 ( 3.7)	15 ( 1.5)	7 ( 1.2)	4 ( 0.8)
사무직원	60 ( 4.4)	201 ( 20.0)	19 ( 3.2)	50 ( 9.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129 ( 9.4)	160 ( 15.9)	45 ( 7.6)	69 ( 13.0)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b>342 ( 25.0)</b>	<b>325 ( 32.3)</b>	<b>326 ( 54.9)</b>	<b>274 ( 51.8)</b>
기능원 및 관리기능근로자	133 ( 9.7)	62 ( 6.2)	21 ( 3.5)	18 ( 3.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61 ( 11.8)	12 ( 1.2)	16 ( 2.7)	1 ( 0.2)
단순노무직 근로자	274 ( 20.4)	202 ( 20.1)	92 ( 15.4)	100 ( 18.9)
전체	1,367 (100.0)	1005 (100.0)	594 (100.0)	52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2001.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취업이 주로 자영업부문과 농업부문에 기대어 있다는 사

실은 고령자 노동시장을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한다. 지금까지의 고령인구의 상당부분은 농촌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고 도시에서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활동, 즉 소규모 창업이 주가 되었다고 볼 때, 이 부분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부문에서 창출되어야 할 고령근로자의 일자리의 수 및 창업의 기회는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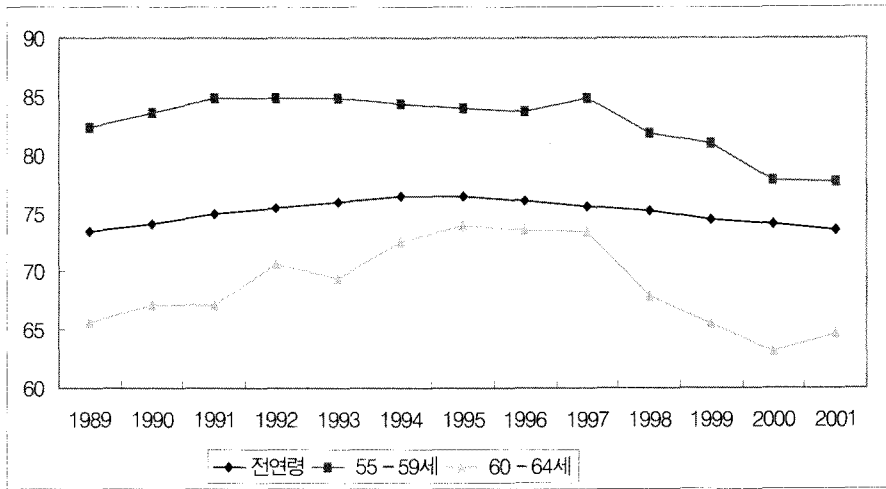
## 2. IMF 경제위기 이후 고령자 경제활동의 변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의 급속한 하락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7년에 55~59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9%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77.7%까지 7.2%p 하락한 상황이다. 60~64세 연령계층도 같은 기간에 73.4%에서 64.7%로 8.7%p 하락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는 감소율이 크지 않지만 55~59세 여성의 경우 54.1%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50.4%로 3.7%p 감소하였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노동시장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연령대의 근로자는 한 번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1997년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달라진 현상이라면, 1997년 이후 기업의 고용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이때 고령자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퇴출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점을 다시 코호트(출생동기)별로 보면, 1990년에 40대로서 취업인구로 포착된 사람들은 250만명이었으나, 10년 후 이들이 5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는 191만 8천명만이 취업자로서 76.7%만이 남게 된다. 노년으로 가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여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50대에 이미 40대 취업자의 약 1/4이 탈락하는 것은 50대 실업 또는 조기은퇴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995년에 91.3%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던 50~54세는 55~59세가 되면 77.8%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그림 5>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남성)

<표 4> 연령·코호트별 취업자수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남성)

(단위: 천명, %)

	취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1990년	1995년	2000년	1990년	1995년	2000년
35~39세	1,422	1,963	1,977	97.0	97.0	95.7
40~44세	1,285	1,460	1,890	95.7	96.6	94.4
45~49세	1,215	1,096	1,383	95.2	94.2	92.6
50~54세	984	1,006	1,129	90.6	91.3	89.2
55~59세	698	793	789	83.6	84.0	77.8
60~64세	357	509	593	67.2	73.9	63.2
남성 전체				74.0	76.5	74.0
40~49cohort	2,500	2,102	1,918			
40~49cht(%)	(100.0)	(84.1)	(76.7)			

자료: 통계청 KOSIS DB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절대규모가 증가하는 한편, 현재의 고령 근로자가 절대다수 분포해 있는 농업부문과 자영업부문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향후 도시와 고용부문에서 고령자

의 고용기간 연장과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고령자의 고실업과 복지의존도 심화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경제위기 이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조기퇴직 경향이 확산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가 다시 이전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반전될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 III. 국내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 1. 고령자 고용촉진사업

노인고용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노인은 많은데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없거나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인재은행을, 서울시에서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남상식, 2000). 또한 복지부에서는 고령자의 소득기회 제공을 위해 1986년부터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과 더불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고령자 기준고용률(3%) 제시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령자 고용촉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더불어 노인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전국 70개소)를, 노동부에서 고령자 인재은행(36개소)을, 서울시에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13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정경배, 1999).

이들 기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의 구직신청을 받아 적절한 일자리와 연계시켜주고 직업교육·훈련, 일자리 발굴 등의 일을 하고 있으나 사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일자리 연계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 1.1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하게 한다는 취지로 2001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01년 종로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5개소로 시작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2002년 8월에 7개

소, 2002년 11월에 8개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2003년 기준, 전국에 20개소의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설립되어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클럽이 위치해 있는 장소에 따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의 시니어클럽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각의 시니어클럽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세부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단별로는 개인창업 지원사업, 노인자조 협동조합형 소득창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자원봉사형 사회참여 등 네 가지 유형의 사업형태로 구분 가능하며, 현재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소득창출 또는 개인창업 지원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각 시니어클럽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사업단을 병행해 운영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협동조합과 실버인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의 운영주체와 예산, 운영사업소 수, 법적 근거, 회원 자격과 회비, 운영방식 및 주요사업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고령자 취업 및 창업지원 기관 운영형태별 비교

구분	일본 고령자협동조합	일본 실버인재센터	한국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주체	각종 사회복지법인, 민간 비영리단체	시정촌 구역별 1개소 각 도도부현지사의 지정을 받은 단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예산지원 /지원금	조합원 출자금 1인당 5,000엔 (정부지원금 없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차등지원 (1,290만엔~1,840만엔)	보건복지부 1억 5천만원(개소당)
운영사업 소 수	29개소(도도부현), 140개지역복지사업소	2,066개소	20개소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준비 중	중고연령자고용촉진특별 조치법(1971) 고령자고용안정법(1986)	-
회원 자격	희망자 누구나 가능, 개인 출자를 통해 조합원으로 인정	60세 이상 고령자	50세 이상 고령자
회비	1 구좌당 5,000엔	600엔~2,000엔 (각 센터별 상이)	-
운영 방식	회원 출자금, 사업수주금, 분배방식	근무량에 비례해 배분	근무량에 비례해 배분 (각 센터별 상이)
주요 사업	1. 삶의보람(생활, 문화, 취미, 여가) 활동 지원 2. 협동노동, 소득창출 전문적 케어 3. 복지서비스관련 일자리 (교육, 양성 파견, 운영) 4. 건강, 예방활동 5. 자원봉사활동, 지역 케 어, 지역공동체 만들기	1. 전문, 기술직 일자리 2. 기능직 일자리 3. 사무직 일자리 4. 관리직 일자리 5. 경작업 일자리 6. 서비스(복지서비스) 일자리	1. 개인창업 지원사업 2. 노인자조 협동조합형 소득창출사업 3.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의 사회참여, 즉 취업 및 창업을 위해서는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능력 및 창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1.2 노인인력뱅크 구축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healthy active elderly)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제력 및 취업률은 저조하여 대부분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노년생활의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창업 및 자활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특성 등을 감안한 「노인인력뱅크」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등과 연계망을 통해 노인의 창업, 취업알선, 유급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황선옥, 2001).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에 기초하여 자본금이 부족하고 특별한 경험 및 사업능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근로능력 및 의욕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용에 의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없어도 경험과 사업능력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에 의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 동안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서 대기업, 정부기관 등 전문·사무직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의 직장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창업에 대한 경영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관련 상담 및 지원자가 거의 중년계층이어서 고령자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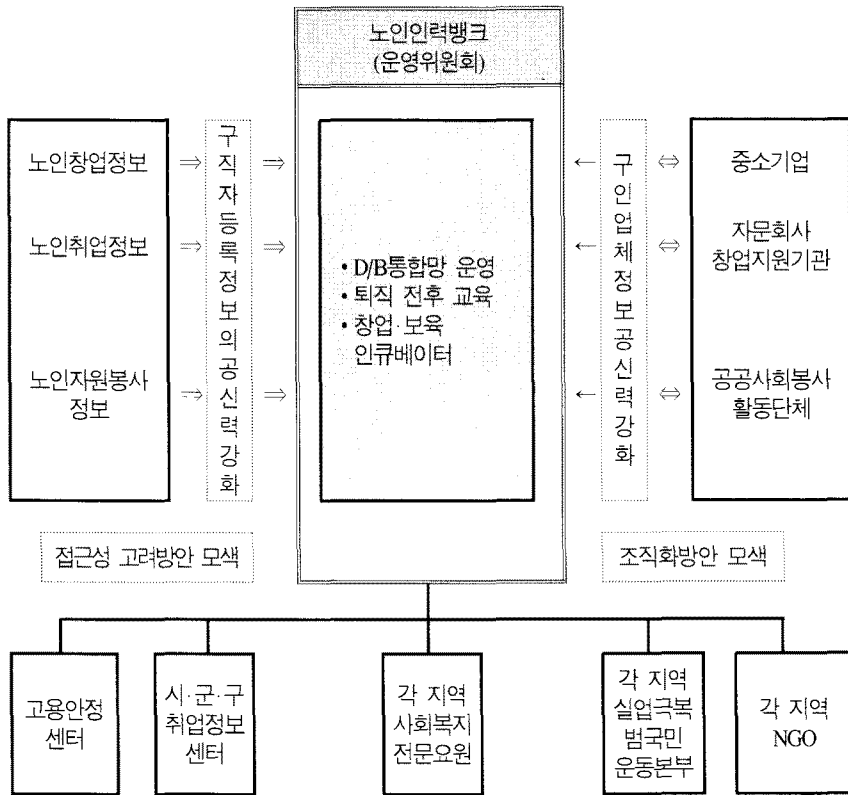
또한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노인인력뱅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력뱅크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먼저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를 정년·명예·조기퇴직근로자의 근무유형, 근무기간, 숙련도,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으로 정리하여 최상의 D/B를 구축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노인복지)단체, 한국창업전략연구소(민간), 대기업 및 정부기관의 OB단체 등, 창업 및 자활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할 수 있다(변재관, 1999).

그 다음으로, 노인인력뱅크는 노인에게 관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인이 필요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유도할 수 있다(이명자, 1998). 특히 노인들의 경륜 등의 장점을 살리고, 청·장년세대의 노동시장이 겹치지 않는 '고령자 틈새시장'을 집중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



<그림 6> 노인인력뱅크 Network 구성도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교육은 퇴직전 교육과 퇴직후 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전문과정을 분리한 것은 현재 퇴직의 시기가 과거와 같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후의 사회적응과 적절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전 교육을 활성화 하고, 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대상자들로 하여금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

적 개선이 요구된다.

### 1.3 고령자 창업의 기대효과

고령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이나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규모 창업이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자립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령자 창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고령자의 창업은 노인계층 자체의 실업을 경감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들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청·장년층의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이철재, 1999). 고령자의 창업은 고령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주변에 있는 청·장년층의 도움 및 고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활용이다(유혜원, 2001). 고령자 중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축적해 온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소유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퇴직 후 개인적인 소일거리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이들 능력있는 고령자들이 창업을 함으로써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무형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자본의 재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자들은 청·장년층에 비해 아무래도 자금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사회에서 은퇴하는 순간 이들이 소유한 재산 및 자본은 은행의 잔고로 남아 있거나 생활비조로 약간의 소비만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사업추천에서 꼭 필요한 자본이 사업에 투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넷째, 국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대다수는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돈은 사치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며 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점차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노인 계층의 인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고령자 창업이 활성화되고 고령자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룸으로써 국가의 부담, 나아가 국민 세금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것이다(김수춘, 1995). 실제로 창업을 통한 자영업 종사는 정년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으로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오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고령자의 자아실현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곧 소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자 창업을 통한 경제력의 확보는 곧 이들을 소외의 대상에서 탈피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 및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실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퇴출로 인해 심한 허탈감과 자아존중감 상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온 점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고령자 스스로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분포 및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현황 및 고령자들의 고용 및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고찰하여 보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빨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 경쟁력 및 고령자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현실이다. 아직까지 관련 법규 및 제도상의 유명무실화로 인해 실질적인 고용 및 창업지원이 미미하지만 국내의 이러한 조기 퇴직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를 위한 고용 및 창업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고령근로자를 총 근로자의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은 이미 기준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1998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고용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는 6.9%이나, 55~59세 연령에 집중되어 있어 60세 이상은 2.9%에 불과한 실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수준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노인고용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년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보급하여, 우선채용직종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60세 이전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년이전 50대 중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업내 창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이를 법제화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희망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이전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교육, 예를 들어 주 5일(하루 3시간정도)의 교육을 연 1~2회 실시한다.

한편, 고령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창업지원단」(가칭) 같은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시·도에 창업지원단을 설치하

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의 노인복지기금에서 고령자 창업지원기금을 확보하여 50대 이후 정년·조기퇴직 가장 및 노인계층을 위하여 장기간 저이자 융자 및 창업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고령자창업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령자 창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창업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춘, 1995, 「고령화사회를 향한 노인복지의 실천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상식, 2000, 「노인의 취업욕구와 취업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재관, 1999, 「고령자창업지원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손경희, 1998, 「노인의 취업실태 및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원, 2001, 「생산적 복지관점에서의 노인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천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자, 1998, 「창업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재, 1999, 「고령자 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배, 1999, 「고령자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3호.
- 정경희 외,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01,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전국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황선옥, 2001,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STRACT

In this study, distribution of population with economic activities in ingress step to advanced-age society, the current status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 people and the necessity of economic activities through employment and inauguration for old people wer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 people and the changes of economic activities since IMF were also reviewed, and the activation of senior club in regional society and establishment of old man power bank were proposed.

The speed of ingress to advanced-age society in Korea is so fast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f old people is urgent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ir economic independence. Up to now, due to the related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inertia, the practical support of employment and inauguration has not been achieved, but, the practical support should be achieved by solving the problems regarding the regulations and institution.